

# 한국농업의 총체적 위기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이후 WTO체제는 한국농업의 전환기적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외적 조건의 해석에 있어, 정부나 경제학자들이 이를 공업화 사회발전에 따른 농업축소의 당연한 과정으로 해석하며, 오히려 한국농업의 해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중·장기적 투자와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농업의 경쟁력과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잘못된 해석과 접근은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수십년 전부터 되풀이해 온 시행착오를 현 노무현정부에서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도 농업예산 배정에는 인색한 것이 그 실례이다. 이는 대다수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질 농업정책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수십년간 되풀이 되어온 정부의 농정부재가 몰고 온, 오늘날 한국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재조명해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기획특집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 도박과 다를 바 없는 한국농업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 농업 정책기조는 증산정책에서 벗어나 신기술 도입을 통한 영농활성화로 선회하였다. 지금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 품종·신기술로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을 교육하고 보급하는 일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영농지도의 틀 속에서 우리 농민들은 한해 농사계획을 잡으며 여러 가지 생산비를 계산해 본다. 토지 임차료, 품값, 종자값, 하우스설치비, 비닐값, 농약값, 비료값 등을 조목조목 계산하며 영농비를 추산한다. 물론 여기에는 본인과 가족들의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총생산비를 산출한 후 마지막단계에서 수지타산을 따지기 위해 당연히 나와야 할 소득부분 산출에 가면 막히고 만다. 지금껏 농민스스로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 가격을 결정해 본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 작년에 시세가 좋아 올해도 재미를 볼까하고 시작하면 과일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적정가격이 형성되었다 싶으면 대량 수입으로 가격이 폭락하

고 한다. 우리 농민들은 경영주체이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해지는 농산물 가격으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영농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실정이다. 작목선택을 순전히 운에 맡겨야 하는 한국농업과 도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 주요소득으로 자리잡은 농외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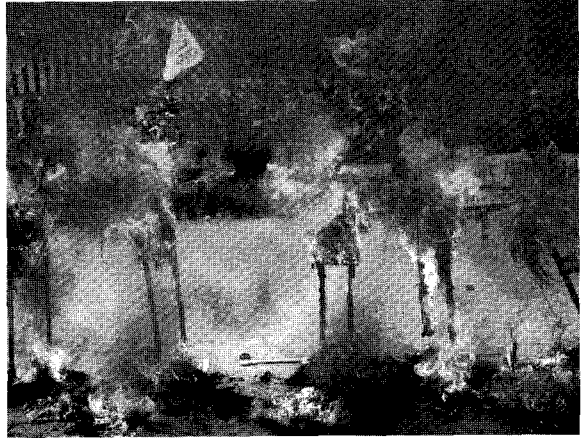


농외소득은 기본적인 농업소득을 전제로 농민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 농

가경제를 더욱 살찌우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득형태를 말한다. 농외소득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1984년부터 꾸준히 조성해 온 농공단지 2003년 현재 314지구에 달하며 그 면적은 4천8백ha에 달한다. 조성비용만도 1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정작 농공단지에 흡수되는 인력의 대부분은 도시노동자이며, 농민은 값싼 임금으로 부러먹기 좋은 60~70대 극소수 노인층이 전부이다. 나머지 농민들은 정부의 농외소득개발 정책과 무관한 분야에서 농외소득을 취하고 있으며 농외소득이 주요소득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농가부채에 있다. 농업소득만으로는 부채를 갚아 나가기엔커녕 오히려 부채를 더 불리지 않으면 다행이기 때문이다.

### 농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농가부채

경제적인 활동이 수반되는 사회생활에서 신용은 곧 제2의 자아라고 할 수 있다. 사회에서 신용



이 사라지면 바로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요즘 농민들은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사라지게 하려는 극단적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즉, 개인파산신고를 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 어다닌다. 왜 이렇게 농민들이 사회생활을 포기하려 하는 것일까?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농가부채의 명에 때문이다. 1965년부터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농가부채는 1985년 소값파동 이후 호당 평균 2백만원이 넘을 정도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더니,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이후 1천만원, 2003년 현재 2천만원을 훌쩍 넘어버렸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농가부채가 누적되는 이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왜 농민들은 이렇게 수지타산도 맞지 않는 농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 국가적 차원에서 특정지역의 인구가 또 다른 특정지역으로 대규모 이동을 하게 되면 유입인구의 수용능력을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고용·주택·교통·교육·범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적비용의 추가부담이 커지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7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농

민들을 농촌에 묶어두려 했던 것이다. 농가부채누적의 결정적 요인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농업의 흐름은 고부가가치 상업농으로 전환되어 가는데,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1차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토대로 공업화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농업의 수준은 자급자족형 가족농 형태로 방치시켜 놓은 채 급진적인 공업화정책으로만 일관하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1967년 GATT체제에 가입하여 농산물시장을 개방하고, 유리한 작목으로 전환하면 홍수출하로 농산물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다반사였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되풀이되는 농업재해는 감소된 농가소득을 더욱 하락시켜 생산비도 못 건지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수십년간 되풀이된 이런 농업의 적자수지타산을 정부에서는 근본적 대책수립을 통해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정책자금 융자로 무마시키려 했기 때문에 결국 채무상환일이 돌아 올 때마다 부채누적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마는 것이다. 이런 농가부채누적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자살하는 농민이 매년 수십명씩 나오고 있지만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소비성 카드빚은 50%까지 탕감해 주겠다는 대안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수십년간 땅만 파먹고 살아온 우리 농민들의 부채는 농민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한다. 상식이 비상식으로 왜곡되고 열심히 일한 자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상한 나라. 아~대한민국.

### 농업재해대책은 물가안정대책이 전부

한국농업이 위기상황으로 내몰리는 내부적인 고질적 병폐가 바로 농업재해 문제이다. 자연과의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농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수립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농업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자연조건을 극복해가며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부해 본다면, 농업재해를 불가항력의 자연재해로만 치부해 왔던 패배주의적 발상이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이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농업재해를 불가항력의 재해로 치부하고 예방자체를 등한시해 왔던 결과가 오늘날 수백배의 막대한 피해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농민들의 피해로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 태풍 '매미'와 더불어 올해 농업재해의 피해로 농가소득이 도시소득대비 60%대로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계속되는 우기로 인해 농가소득의 30%대를 차지하던 쌀이 냉해피해를 겪었으며, 태풍 '매미'의 피해까지 겹쳐 수확량이 10%가량 감소하여 8,700억원 가량의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발작물에 있어서도 배추나 무우 등은 20%이상, 고추는 36%, 대파·쪽파·감자 등은 30~47%까지 수확량이 감소되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농업재해대책 부재의 1차 책임은 뒤로 하고 물가안정대책 운운하며 농산

물수입에만 급급해 있다. 농산물수입에 의한 문제 해결은 극약처방이다. 약효는 빠르지만 그 후유증은 쉽게 가시지 않는 마약과 같은 조치로써, 정부가 이를 너무 남발하다보니 그 후유증에 대한 인식이 너무 무뎠던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 정부의 시녀노릇만 해왔던 농협

정부의 안일한 농정을 농민의 입장에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선도했어야 할 농협의 역할은 어떠했는가? 농림부의 농업정책을 그대로 농민들에게 시행만 해온 농협의 시녀노릇은 한국농업이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농민들의 채무상환 능력이나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영컨설팅을 수반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적이나 안면에 의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고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무비판적인 업무의 연장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오늘날 미성년자나 변제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카드를 만들어주고 사용하도록 하게 하여 카드 빚 대란을 불러온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경제사업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보다, 농촌에 대한 향수와 농업의 이미지를 등에 업고 손쉬운



신용사업에만 주력해 왔다. 물론 신용사업도 발전해야 할 부분이지만 지금처럼 본말이 전도된 기형적 성장은 농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무디스 신용평가를 자랑으로 여기며 농협의 저력을 과시하는 잘못된 인식을 하루빨리 깨지 않는 한 농업의 어려움은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 WTO체제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

농산물수입개방에 의한 국내농업붕괴의 발단은 해방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PL480법'에 의한 농산물 원조는 점차 국내 생산 기반을 위축시키고 미국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를 높িয়ে 만들었다. 1970년대는 그나마 식량 부족분에 대한 수입과 가축용 사료 수입정도가 전부였지만, 1980년대는 쌀, 소, 쇠고기 등의 과다 도입으로 농산물수입의 후유증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경해 열사도 바로 이 시기에 정부정책 자금을 받아 농장을 설립했다가 3억 이상의 농가 부채를 떠안은 경우이다. 노태우정권이 들어서면서 개방농정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이 때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한 가격 파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수입을 통한 해당농산물의 가격 폭락은 대체작목으로 작목전환이 이루어졌지만, 이 또한 대체작목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의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 진행중인 WTO 농업협상도 바로 이러한 무분별한 개방농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WTO 농업협상에서 선진국들이 요구하는 농산물개방수준은 바로 국내 농업을 붕괴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해일 같은 수준이다. 100% 이상의 고관세 품목이 140여개나 되는 국내농업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제5차 WTO협상에서 논의된 농업분야 개방조건은 선진국·개도



국간 별다른 차이 없이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미국은 관세상한선을 동일하게 25%로 정하자는 제안까지 하고 있어, 앞으로 WTO체제가 불러올 후폭풍은 우리 농업의 붕괴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경제기반 전체를 뒤흔들 만큼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게다가 케언즈그룹 국가 중 하나인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정부의 농업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농산물의 생산 기반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



고, 농민들의 소득원은 나날이 위축되어 결국 농업의 몰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 총력투쟁으로 지켜내야 할 우리의 생존권!!!

현 상황에서 WTO체제가 요구하는 수준의 농업개방은 우리에게 농업붕괴와 다름없다. 하지만, 당장 오는 12월 15일에 WTO특별회의가 개최되고 2004년에는 쌀 재협상이 이루어진다. 농업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코앞에 닥쳐왔다. 우리는 WTO를 반대하며 결사투쟁으로 항거하신 故 이경해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록 열사의 시신은 땅 속에 묻혔지만 열사의 정신과 우리의 투쟁의지까지 땅속에 묻혀서는 안 될 것이다. 열사의 숭고한 뜻은 우리의 투쟁으로만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을 마음 속 깊이 되새기고, 저 악랄한 WTO체제를 향해 우리의 농업과 민족의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투쟁의 깃발을 힘껏 드높여야 한다. 위기에 처한 한국농업을 지키는 것은 우리 농민 모두의 문제이며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농업비상시국인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농민단체들과의 결속력을 다지고 강인한 연대의식으로 맞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11월 19일 전국농민대회는 농업붕괴와 새로운 도약이라는 역사의 기로에서 우리농업의 희생과 400만 농민생존권 수호를 일구어 낼 중요한 투쟁이 될 것이다. **민농연**